

대한민국: 세월호 참사 추모 시민 및 유가족에 대한 정부의 폭력적 대응은 한국 민주주의 퇴보의 방증

(방콕, 2015년 4월 26일) 방콕 소재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는 2015년 4월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발생한 세월호 유가족 및 시민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폭력적 탄압을 규탄한다. 당시 유가족들과 시민들은 한국 정부의 공정하고 진실된 세월호 침몰의 진실규명을 요구하며 평화로운 추모 행진을 하고 있었다. 포럼아시아는 무엇보다도 평화로운 시위를 하던 시민들에 대한 정부의 폭력적 대응은 박근혜 정부 아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하나의 방증이며, 경찰의 시민들을 향한 무차별적인 물대포 및 최루액 사용과 경찰 버스를 이용해 이동의 자유를 제한한 차벽에 대해 비판한다.

2015년 4월 18일,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기 위해 모인 수만 명의 시민들은 서울 시청광장영역에서 열린 추모 행사에 참여한 후 세월호 참사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하며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광화문을 지나 청와대를 향해 행진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광화문, 경복궁 및 서울 시내 곳곳에 배치된 약 13,700 명의 경찰 병력과 477 대의 경찰 차벽에 막혀 시민들은 원활하게 행진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시민과 유가족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물대포와 최루액을 살포했고 수많은 시민들이 이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 또한 경찰 버스를 이용한 차벽 설치로 인하여 시민들의 이동이 통제되었다. 경찰 차벽은 추모 행렬에 참가한 시민들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통행까지 방해하였다. 이러한 경찰의 과도한 추모 행사 방해 행위는 시민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였으며, 경찰과 시민, 유가족 간의 충돌을 유도하였다.

포럼아시아의 존 리우 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프로그램 매니저는 “시민들에 대한 경찰의 과도한 무력사용은 무분별하고 불필요한 조치였으며, 국제인권규범에 위배되는 행동” 이라고 지적하며 한국 경찰에 유엔의 법집행관 행동강령 (UN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과 법집행관의 무력 및 화기 사용 기본원칙 (UN Basic Principles for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2011년 헌법재판소는 경찰 차벽을 이용한 통행방해 및 시민들의 집회현장 봉쇄는 시민들의 통행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고 지적하였다.

이 날 약 100 여명의 시민들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0 조 1, 2 항에 따른 해산명령 불응죄 및 형법 제 185 조 일반교통방해죄 아래 무분별하게 체포, 연행되었으며, 연행된 시민들 중에는 21 명의 세월호 유가족과 5 명의 미성년자가 포함되었다.

포럼아시아 존 리우 매니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진실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한국 정부는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에 대한 책임이 있다. 시민들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명시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합법적으로 표출하였으며, 이에 한국 정부는 시민들의 권리를 억압하는 대신 시민들의 진상규명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있다.” 고 설명했다.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는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부 아래 시민들의 참여 공간이 줄어들어 가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지적하였다.

포럼아시아 사무총장인 에블린 발라이스-세라노는 “한국은 한 때 아시아 민주화의 주역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보고된 여러 인권 침해 사례들은 한국의 인권상황이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헌법과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권리규약에 명시된 대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 할 법률적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시민들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할 의무도 있다.” 고 강조했다.

에블린 발라이스-세라노 사무총장은 세월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한국 시민들을 지지하며, “한국 정부는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과정에서 연행된 시민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즉각 철회해야 하며, 독립적이고 진실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힘써야 한다” 고 주장했다.

포럼아시아:

포럼아시아는 태국 방콕에 소재한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로 16 아시아 국가에 47 개의 멤버단체를 두고 있다. 포럼아시아는 방콕, 자카르타, 제네바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의 인권침해 및 유린 상황, 표현의 자유 및 집회 결사의 자유, 인권옹호자, 민주화 이슈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문의:

- 존 리우, 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프로그램 매니저, 포럼아시아, johnliu@forum-asia.org +66802828610
- 핼시리 페차나봄, 동아시아 프로그램 오피서, 포럼아시아, pimsiri@forum-asia.org, +66813405409
- 김세진, 인권옹호자 프로그램 어소시에이트, 포럼아시아, sejin@forum-asia.org, +66926347034